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 경고

방동제(콘크리트 동결방지제) 관련 사고가 다발하는 동절기에 접어들자 안전보건공단은 11월 8일자로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 경고’를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방동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방동제가 들어있는 용기(드럼통, 페트병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현장의 근로자들이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인지 모르고, 이를 식수로 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방동제 음용사고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23일 경기 파주에 소재한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컵라면을 먹고 호흡곤란 및 의식 상실에 빠졌었다. 당시 이들이 컵라면에 부은 물은 부동액이 함유된 물이었다. 지난해 11월 29에 발생한 사고도 이와 비슷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모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부동액이 함유된 물로 커피를 타 먹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이 같은 실태를 감안해 안전보건공단은 방동제 희석용 용기에 MSDS 경고표시를 반드시 부착해 줄 것과 취급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단은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동제 취급 작업장 내에는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해

달라고 일선 현장에 요청했다.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용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용기에는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가 실수로 방동제를 마신 경우 최대한 빨리 인근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면서 “서울 아산 병원 독극물센터(02-3010-6589)로 연락하면 해독제가 비치된 전국 14개 병원으로 연결되어 2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4분기 산업재해 소폭 감소

올해 3/4분기 산업재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2013년 1~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자수는 모두 68,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9,609명)와 비교해 636명(-0.9%)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상반기에 감소세를 보였던 사망자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4분기까지 1,412명이 사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1,398명) 대비 14명(1%)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고재해자는 752명이 감소한 반면 질병재해자는 116명이 증가했다. 사망자의 경우도 사고사망자는 58명이 줄어들었지만 질병사망자는 72명이

늘어났다.

한편 업종별 재해자는 서비스업이 34.1%(2만3,496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제조업(32.2%, 22,228명), 건설업(24.7%, 17,0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건설업이 29.2%(413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제조업(23.7%, 334명), 서비스업(16.8%, 23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5%(56,183명)의 재해자가 나왔다. 사망자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이 42.6%(601명)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5~49인 34.3%(484명), 5인 미만 23.1%(327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재해가 증가한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전히 3대 재래형 재해인 ‘넘어짐’(21.8%, 13,762명), ‘끼임’(17.4%, 11,027명), ‘떨어짐’(15.8%, 10,023명) 등이 전체 재해의 55%를 차지해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개편 예고

2013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합감사는 피감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된다는 점에서 일반감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앞으로 고용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방향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800억 미만의 건설현장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산업 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하지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적용된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2011년 0.11%이던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체결 사업장의 재해율은 지난해 0.16%, 올해 상반기 0.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20억 미만 공사 현장의 재해율은 2011년 1.82%였지만 지난해는 2.04%로 높아졌고, 상반기에는 2.15%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감독인력을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투입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용부의 계획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감독점검표와 마찬가지로 자율안전 컨설팅 점검표에도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야간근로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정에 의원(민주당)은 “야간근로는 암 발병 확률을 높이고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며 “하지만 영세업체에서는 2교대, 3교대 등을 통해 야간근로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야간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며 “이에 따라 약 13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법 테두리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장관은 “중소 사업장의 경우 가급적 자율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현재는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용지원대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016년으로 연기

내년 1월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이 2016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2년간 유예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정부 발주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3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기업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재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과 중소기업사의 경영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적용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 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그간 최저가낙찰제의 대체수단으로 제시되어 왔다. ☎